

2024-08-08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2024-18호 (2024년 8월 8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따르면 위메프·티몬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7월 말 기준으로 2,745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다가오는 정산기일 분을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총 5,600억 원+a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e-커머스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에서 논의하여 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논의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재발의 되어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 저출산 과제」 정책을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주된 국정운영 아젠다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위클리 포커스 [바로가기](#)

- Focus 1.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대응 및 입법 동향
- Focus 2.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Focus 3. 「4대개혁 + 저출산 과제」 정부 정책 동향

II. [국회] 입법 동향 [바로가기](#)

- ① 상임위 및 본회의 법률안 의결
 - [2202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② 신규발의 법률안
 - 전력 및 에너지 산업 관련 법안
 - 하도급 공정화 관련 법안
 -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법안
 - 기술 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방지 관련 법안
 - 금융·여신회사 관련 법안
 - 의료기기 관련 법안
 -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바로가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규제정(안) 입법예고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Focus 1.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대응 및 입법 동향

-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7월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총 5,600억 원+a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 자금과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지원 중입니다.
- 또한 8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이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논의 방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내용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관련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

[보도자료]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바로가기](#)

[보도자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이행상황 점검

[바로가기](#)

[보도자료] 오픈마켓 정산 실태점검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보도자료]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방안 발표 (07.29)

[바로가기](#)

[국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 발의 동향

법률안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20252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여 정산주기를 이용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일탈행위를 방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2202509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정의 •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 검색결과 순위 결정기준, 소비자 이용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p>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의원 등 16인) 220236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대가,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 절차,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등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p>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의원 등 11인) 2201432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 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거래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재화 등 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p>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44인) 2201430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 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금지청구제도와 손해배상책임 규정 도입
<p>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2201416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이 단체가 중개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p>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2200945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재화 등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구매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p>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 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2200371 / 정무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총매출액 5천억 원 이상 또는 국내 총판매금액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부과 •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Focus 2.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30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공시기한 조정

-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휴일근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행) 1일에서 (개정) 3영업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중복 공시사항 정비

- 중복 공시사항 정비의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4. 시행 일정

-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자료

[보도자료]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바로가기](#)

Focus 3. 「4대개혁 + 저출산 과제」 정부 정책 동향

- 정부는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 저출산 과제」 정책을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주된 국정운영 아젠다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기나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8월 말 또는 9월 초 주제별 개혁 및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및 노동 개혁

교육개혁의 경우 늘봄학교 확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운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기 초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 대응, 노조 회계 투명화 등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차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개혁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모두 서로의 안을 제시할 것이며, 연금 보험료율(9%)와 소득대체율(42%)을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과 연금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자는 '구조개혁안' 모두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는 구조개혁 방안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

의료개혁의 경우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강경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의정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신설 등 행보와 함께 22대 국회의 주된 아젠다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관심이 높은 문제로 관련 입법 및 예산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자료

보도자료] 정부 4대 개혁 등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바로가기](#)

[언론도보]尹, '4+1 개혁' 국민께 직접 보고, 2024.08.05. 한국일보 [바로가기](#)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① 상임위 및 본회의 법률안 의결

법령안 및 주요내용	진행 상황
<p>[2202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산정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p>본회의 의결 2024.08.05</p>

② 신규발의 법률안

전력 및 에너지 산업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p>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등 50인) 220250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수소발전사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허용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자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22025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 신에너지(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새롭게 규정

하도급 공정화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2202263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202440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2202501 /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수급업체,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하고,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확인 의무 미이행 하도급사에 대해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 조치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2202073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2202398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영업점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술 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방지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22025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여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책임을 부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법률안	주요 내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22025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2202447, 220242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특허법」과 동일하게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등을 포함한 증거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증명을 위한 자료 제출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금융·여신회사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2202422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 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2202394 / 정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의료기기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2202467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장기적인 추적조사와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법률안	주요 내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22202070 / 보건복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사법」 상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규정을 참조로 하여,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라고 판정한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피해구제급여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 법안

법률안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222040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의 온라인상 불법 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1인) 222037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222047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

I. 위클리 포커스

II. [국회] 입법 동향

III. [정부부처] 정책 및 입법 동향

시행령·시행규칙 의결 및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 2024-07-30

시행 일자	2024-08-07(예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료의 특성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로 명시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대상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을 추가하고, 친환경 원료가 아닌 물질을 활용·제조한 바이오연료 공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4-07-30

시행 일자	2024-08-14(예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당국의 보험사기행위 조사권이 강화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과 환급 가능성, 환급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함(기존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 2024-07-23

시행 일자	2024-07-30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개인투자자의 P2P금융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 한도를 확대. 기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 5백만 원(소득 1억 원 초과시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소득 1억 원 초과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투자 한도 확대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규제정(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4-07-31

입법예고 기간	2024-07-31 ~ 2024-09-09
시행 일자	2025-01-24(예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하위법령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와 등급 기준 세분화, 제품 특성에 맞춘 허가·품질관리 등 규제 설계, 임상시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광고 및 판매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시설기준 및 허가요건, 그리고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을 포함• 특히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독립형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수준(등급) 분류 기준 마련•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허가 등 특례' 등 다양한 허가·평가 체계를 도입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전문위원



최준영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